Vol. 45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2021. 11. 22.

▌정책동향

- 원유가격·거래체계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안)
-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확정
- 농식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20선 선정
- 2021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결과
-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발표회 결과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 가상홍보 플랫폼 '욱 크래프트' 구축
- 수확기 농가의 원활한 벼 출하 지원 추진
- 동계작물 재배용 요소비료 특별공급물량 배정·공급
-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 2021년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수상자 선정
- 조류인플루엔자(AI) 주요 동향
- 각 도별 주요 정책 동향

▌아젠다발굴

- **[기획] 기후변화** ❙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주요 결과
- **이슈 브리프** ❙ RCEP 영향평가의 농업 부문 주요 결과와 향후 과제
-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농무부 기후변화 대응 정책 I
-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디지털 전원(田園)도시 국가 구상 실현회의 개최
- **언론 동향** ❙ 2022년 대선 농정공약 주요 동향

▌통계·조사

- 2021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

정책동향 원유가격·거래체계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안)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1.16./11.17.)

❑ 개요

○ [농식품부, 제3차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개최, 2021.11.16.]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제3차 회의를 2021년 11월 16일 개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방안과 중장기 원유거래 방식 개편(안) 등을 설명, 각계의 의견을 수렴

- (낙농산업 현황) △지난 20년간 유제품 소비 증가 상황에서도 국내 생산량은 감소하고 자급률은 하락※하였으며, 낙농 제도가 혁신적인 젊은층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원유가격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낙농산업 지속가능성 우려

※ 유제품 소비·수입 46.7%, 272.7% 증가, 원유 생산·자급률 10.7%, 29.2%p 감소

〈주요 안건 내용〉

◈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원유거래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 현재는 쿼터 내에서 단일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유의 용도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여 가격을 다르게 적용

- 음용유 1,868천 톤을 1,100원/ℓ에 구매하고, 가공유 307천 톤을 900원/ℓ에서 구매하는 방안 제시 (낙농가 소득은 현재보다 1.1% 증가)
- 유업체의 평균 구매단가는 낮아지고 국내 생산 증가로 자급률 제고
- 중장기적으로는 MMB(생산자 연합)-유업체가 직거래하되, 구매계획 사전 신고, 승인 및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원유거래 추진

◈ 우리나라 원유가격 결정 및 수급을 담당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

- 현행 이사회는 생산자 위주로 구성되어 소비자나 학계의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편 추진

❑ 개편방안(안)

1.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의 용도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가격결정 제도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

정책동향

- 원유는 산업적으로 시유, 발효유, 치즈, 버터, 크림, 분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품가격도 최종 산물에 따라 상이※

  ※ 유가공업체는 집유한 원유를 시유 등 음용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간 보관을 위하여 치즈, 분유 등을 생산

  ※ 유가공업체가 시유, 발효유, 유음료 등을 생산하는 경우 수익이 발생하지만, 치즈·분유 등을 생산하면 손실 발생

○ 국가별로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원유의 용도는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음용유 원유가격을 가공용 원유가격에 비해 높게 책정

▌주요 국가별 원유가격 차등을 위한 용도 구분 현황▐

구분	원유 용도 분류
일본	① 음용유용, ② 생크림용, ③ 버터, 탈지분유용, ④ 치즈용
미국	Class Ⅰ: 음용유용 Class Ⅱ: 요거트, 아이스크림, 코티지 치즈와 같은 연질 제품용 Class Ⅲ: 경질치즈, 크림치즈, 유청용 Class Ⅳ: 버터, 탈지분유와 같은 건조 제품용
캐나다	Class Ⅰ: 음용유, 크림용 등 5개 그룹으로 세분 Class Ⅱ: 요거트, 아이스크림용 2개 그룹으로 세분 Class Ⅲ: 치즈용 5개 그룹으로 세분 Class Ⅳ: 버터, 분유, 농축유용 등 6개 그룹으로 세분 Class Ⅴ: 과자제품 원료용 등 4개 그룹으로 세분 Class Ⅶ: 초미세여과로 추출한 우유·분유, 탈지분유

출처: 낙농진흥회

○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 제품의 가격을 반영하여 원유가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

- 수요와 공급 등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적용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원칙, 이를 통해, 수요와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산업의 지속가능성 담보

- 가격이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이 특정 주체에게 전가될 우려가 커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악영향

○ [기본원칙] 원유의 용도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되, 농가소득 안정 및 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정부지원을 통해 생산량 확대

  ※ 생산비 변화, 수요 변화, 정책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물량 및 가격 결정

- (용도) 원유의 용도를 우선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가공유를 치즈, 아이스크림, 분유 등으로 세분하는 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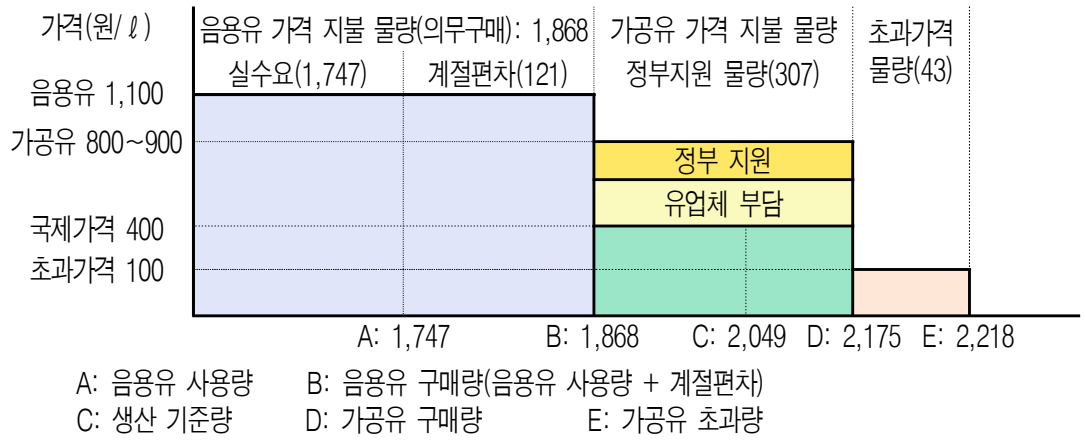
정책동향

- (물량) 음용유 소비량 등 유가공업체의 수요를 반영하고 농가소득 및 정부지원·유가공업체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물량을 결정하되, 우유 국내 생산 및 자급률이 제고되도록 결정

- (가격) 음용유와 가공유 가격은 기본가격과 인센티브 가격※으로 구성

※ (기본가격)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생산비와 유가공업체의 생산원가, 원유의 수급 상황, 낙농가의 소득, 국제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 (인센티브 가격) ① 인센티브 가격 총액은 확대, 세부 항목별로 가격 규모 조정, ② 인센티브 가격은 용도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적용, ③ 산차 및 유우군검정산업 인센티브 가격 신규 도입

▌2022.10월 시행방안(안): 예시 ▐



○ [병행추진 과제] 장기적으로 원유 자급률의 제고를 위해서는, ① 낙농가의 규모화와 생산비 절감 추진과 함께 ② 국산 원유를 사용하는 프리미엄급 신제품 개발 및 소비 확대가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R&D 투자 대폭 확대

2. 2024년 이후 원유거래 방식 개편(안): MMB-유업체 직거래

○ 거래체계 개편을 위하여 낙농진흥법 개정 등 제도개선은 2022년부터 추진하되, 법 시행 이전이라도 시범사업 실시

○ 생산자-수요자의 직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농가의 계획 생산 및 생산량 보장을 위하여 유업체의 구매 계획량 사전 신고, 낙농진흥회의 승인 및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 유지

- ① 유업체는 매년 초에 음용유, 가공유 구매계획을 낙농진흥회에 신고, 전국의 모든 유업체는 생산능력, 수요량 등을 감안하여 음용유, 가공유 구매계획 작성 및 제출

정책동향

- ② **낙농진흥회**는 유업체의 전년 원유 사용실적, 수요 변화, 가공시설 처리능력, 유제품 자급률, 농가 생산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요량 승인**

- ③ **생산자(MMB)**※와 **수요자(유업체)**는 **자율 협상**※※을 통해 **용도별 거래물량**과 **가격**을 **결정**: 대등한 거래교섭력 확보를 위해 생산자 MMB나 소규모 유업체 연합 설립 유도 및 촉진, 낙농진흥회의 직접 구매 물량은 폐지, 낙농진흥회는 원유거래 중개 역할만 수행하고 직접 구매 및 판매 기능은 폐지

  ※ MMB는 유업체와 거래하는 단위별로 설립(낙농가 연합, 낙축협조합, 낙축협조합 연합 등 다양한 형태 가능)

  ※※ 협상 지원을 위하여 낙농진흥회에 지원단 설치

- ④ **자율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물량**과 **가격결정**을 **낙농진흥회**에 **조정 의뢰**※(중장기적으로 낙농진흥회가 미거래 물량을 직접 조정하는 대신 원유거래소를 운영하는 방안(경매) 검토)

  ※ 협상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낙농진흥회 내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낙농진흥회는 물량 및 가격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사전 공표

- ⑤ **유업체**가 **낙농진흥회**에서 **승인**받은 **물량**만큼 **구매하지 못하면 과태료**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벌칙제도 도입·운영**

〈낙농진흥회 물량 및 가격결정 가이드라인〉
◈ **(음용유 구매량 결정)** 전문가 연구용역과 중립적인 이사 구성으로 보완된 이사회에서 유업체 수요, 판매실적 및 계절편차를 감안하여 결정
◈ **(가공유 구매량 결정)** 농가소득, 국제가격, 원유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농가소득 및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정
※ 장기적으로 수급 상황과 유업체 수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
◈ **(구매가격 조정)** 2022년 시행방안(안)을 기본으로 하여 조정

❍ **現 쿼터 보유 농가**의 **MMB 우선 가입 및 협상 보장**

- **기존 쿼터**는 **거래 시 마다 10% 감축**하고, **쿼터**를 **보유**한 **농가**는 **MMB 우선 가입**과 **유업체**와의 **우선 협상권 보장**, **신규 쿼터 구매 농가**에 대해서는 **10년 범위 내**에서 **유업체**와의 **우선 협상권**을 **보장**

❍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이후**의 **변화 전망**

- **(낙농가) 규모화**와 **생산비 절감**으로 국산 원유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을 늘려 **자급률 제고** 및 **소득 증대**

정책동향

- (유업체) 고품질 프리미엄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유제품 생산에 국산 원유 사용량을 확대하고 유제품 판매수익 개선

- (정부) 생산비 절감방안 추진, 신제품 개발과 새로운 수요처 발굴을 위한 R&D 지원 및 유제품 생산 시설, 가공유 구매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3. 생산비 절감방안

○ 사료단가 안정

- ① 낙농분야 수입조사료 저가공급 확대: 할당관세 배정량※ 확대, 조사료 수입 단계적 개방 확대 추진

  ※ (2019) 60천 톤(전체의 6.8%) → (2020) 57(7.1) → (2021) 60(7.5) → (2022) 확대 검토

- ② 국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및 고품질화 지원: 전문생산단지 확대, 품질 등급제 시행 및 차등지원 확대※

  ※ 조사료생산지원: (2021) 62,711백만 원 → (2022안) 64,432(보조율 30~90%)

  ※ 조사료유통지원: (2021) 1,833백만 원 → (2022안) 3,062(보조율 30~40%)

- ③ 농가사료구매자금 및 사료회사 원료구입자금 지원 확대※

  ※ 농가사료직거래(융자 100%): (2021) 3,450억 원 → (2022안) 355

  ※ 사료회사지원(융자 100%): (2021) 510억 원 → (2022안) 65

- ④ 기타 조사료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Harvestore 지원 등 추가대책 검토

○ 사료 저투입

- ① 정밀사양(precision feeding) 연구, 젖소 사양표준 4차 개정(2022)으로 국가단위 영양모델 구축지원 추진※: 국가차원의 젖소 사료분석센터 신설 및 실증연구 지원, 농가 확산을 위한 컨설팅 지원 확대 검토, 젖소 개량 방향도 유량 중심에서 품질·위생 중심으로 전환

  ※ 젖소 급여량 1% 감축 시 연간 사료비 56억 원 절감 효과 발생, 미국 코넬대 연구 결과 정밀 사양을 통해 사료비 24.2% 감소 확인

- ② 적정투입, 산차증가 유도를 위한 가격구조 개편 등 추진: 유지방·세균수 가격 축소, 체세포수 가격 유지, 유단백 가격 확대, 산차 및 유우군검정산업 인센티브 가격 신규 도입

정책동향

○ 가축비 절감: 산차증대를 위한 대책추진(사료단가 안정 및 사료 저투입 중복)

- ① 3산 이상에 원유가격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및 조사료 급여 확대 대책 추진, ② 젖소용 배합사료 사료 성분규격 조정 검토(조단백 감소 등), ③ 가공용에 적합한 저지종 도입 확대 지원방안 검토※

※ 저지종 사육 현황(두): 서울우유 155(암155), 축산과학원 40(암29, 수11), 당진낙협 32(암31, 수1)

○ 인건비·시설장비비·사육관리비 절감

- ① 인건비 대책은 농업분야 전체 인력 대책에 포함하여 추진

- ② 시설장비비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요하나 초기 투자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ICT 장비 중심으로 지속 지원※

※ ICT시설 설치 지원: (2021) 67,200백만 원 → (2022안) 78,400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 ③ 낙농지구 지정 등 스마트축산 ICT 낙농단지 조성 확대

- ④ 가축분뇨처리지원 확대 추진(2022년 공공형 총사업비 400억 원 수준 1개소 시범도입 및 시·군 축산분뇨실태조사 신규도입 61억 원)

- ⑤ 중소농가 공동 사육에 필요한 육성우전문목장 등 공동사육시설 설치 지원 검토

4. 우유 유통구조 개선

○ 상시 발생하는 과잉원유를 시유로 판매하기 위하여 유업체 간 과당경쟁이 심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유통업체와의 협상 교섭력 취약

○ [향후 계획] 전문가 연구용역 실시(2022년 상반기) 및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추진

제3차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개최 결과

1. 정부 실무 추진단 제시안 주요 내용

○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MMB(생산자 연합)-유업체가 직거래 하는 방식으로 원유거래 개편※

※ 현재는 쿼터 내에서 단일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유의 용도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여 가격을 다르게 적용

정책동향

- 음용유 1,868천 톤을 1,100원/ℓ에 구매하고 가공유 307천 톤을 900원/ℓ에서 구매※하는 방안 제시(낙농가 소득은 현재보다 1.1% 증가)
  ※ 정부는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에 대하여 100~200원/ℓ 지원

- 유업체의 평균 구매단가는 낮아지고 국내 생산 증가로 자급률 제고

- 중장기적으로는 MMB(생산자 연합)-유업체가 직거래하되, 구매계획 사전 신고, 승인 및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원유거래 추진

○ 우리나라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수급을 담당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체계 개편 방안으로,

- ① 이사회가 일반국민(소비자)·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② 지나치게 엄격한 이사회 개의 조건을 폐지하되, ③ 의결 조건은 강화하고, ④ 이사 선임 절차를 총회에서 이사회로 위임하고, ⑤ 정관 제·개정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

○ 우리나라 원유가격 결정 및 수급을 담당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체계 개편 방안에 대하여 추가 의견수렴

- 현행 이사회는 생산자 위주로 구성되어 소비자나 학계의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편 추진

2. 각계 입장

○ [소비자]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공감, 낙농산업도 소비자의 소비상황과 변화를 고려해야 지속 가능

○ [학계]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며, 시장을 음용유 중심에서 가공유제품으로 전환

○ [유업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시 계절편차 121천을 음용유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도개선으로 유업체의 원가부담 완화 필요

○ [생산자] 정부가 제도개선을 일방적으로 추진, 낙농가 의견 반영 필요

○ [낙농진흥회]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안)이 뜻깊고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제도 시행 필요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확정

자료 : 국토교통부(2021.11.17.)

개요

○ [국토교통부, 해안·내륙권의 미래 비전 담은 발전종합계획 확정, 2021.11.17.] 향후 2030년까지 5개 초광역권※(2개 해안권 및 3개 내륙권)의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확정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해안내륙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총 6개의 초광역권역 중 지난해 변경 완료한 남해안권을 제외한 동해안권, 서해안권,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등 5개 권역

주요 내용

○ 이번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에는 그간 추진해 온 지역 간 연계,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 외에 초광역적 지역특화벨트 구축 등 국가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략이 대폭 강화

- 이에 따라, 수소경제벨트 조성(동해안권), 바이오·스마트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서해안권), ICT·AI 융복합 산업 지원(내륙첨단산업권)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이 다수 반영

- 5개 권역의 추진 전략에 따라 발굴된 사업 수는 국가, 지자체, 민간투자 사업 등을 모두 포함하여 577개로 총사업비는 약 60조 원으로 추정되며, 투자액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118조 9,41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8조 8,140억 원, 750,623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주요 사항▐

권역별	주요 사항
❶ 동해안권	• "지속가능한 환동해 블루 파워벨트"를 비전으로, ① 에너지산업 신성장 동력화, ② 글로벌 신관광 허브 구축, ③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④ 환동해권 소통 연계 인프라 확충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 – 특히,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수소경제벨트 조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융복합 에너지 거점 구축 등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화할 것을 강조 • 추진 전략 달성을 위해 동해안 액화수소 클러스터,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환동해 해양메디컬 힐링센터,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 등 핵심사업 7건을 포함하여 83개 사업을 검토·추진할 계획

정책동향

권역별	주요 사항
❷ 서해안권	• “혁신과 융합의 글로벌 경제협력지대” 를 비전으로, ①국가전략산업 집적 · 클러스터 조성, ②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특화산업 육성, ③ 국제적 생태 · 문화 · 관광거점 조성, ④ 초국경 · 초광역 공동발전협력체계 구축, ⑤지역 · 발전거점 간 연계인프라 확충을 5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 – 특히, 바이오 산업벨트 구축과 스마트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 국가전략산업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할 것을 강조 • 추진 전략 달성을 위해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도심항공교통 클러스터, 자동차–IT 융합산업단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등 핵심사업 26건을 포함하여 106개 사업을 검토 · 추진할 계획
❸ 내륙첨단산업권	•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 국가 혁신성장 선도지역” 을 비전으로, ① 미래지향 과학기술 혁신인프라 조성, ②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③ 지역자산 기반 문화관광 거점, ④ 지역인프라 구축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 – 특히, 첨단산업의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소 · 부 · 장 클러스터 구축과 ICT 융용단지 조성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산업권역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권역으로 발전할 것을 강조 • 추진 전략 달성을 위해 수소 모빌리티 파워팩 기술지원센터 구축, 초소형 전기차 부품개발, 금강권역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등 핵심사업 11건을 포함하여 146개 사업을 검토 · 추진할 계획
❹ 백두대간권	•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그린벨트” 를 비전으로, ① 지역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② 융복합형 녹색여가 벨트, ③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④ 연결성 극대화를 통한 네트워크형 공간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 – 특히, 권역 특성을 고려하여 생태보존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집중하되, 융복합 신산업 지원 확대와 백두대간 특화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미래지향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산업을 활성화 • 추진 전략 달성을 위해서는 한반도 트레일 세계화 조성, 신비한 지리산 D–백과사전 구축사업, 국립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등 핵심사업 30건을 포함하여 155개 사업을 검토 · 추진할 계획
❺ 대구 · 광주 연계협력권	• “끈끈한 영호남 연계 · 협력, 모범적인 동반성장” 을 비전으로, ① 문화 · 관광 · 인적자원 활용 · 연계, ② 첨단 · 융합산업 중심 산업구조 고도화, ③ 지역특화산업 육성 · 지원, ④ 초광역 연계 인프라 구축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 – 특히, 동서화합 중심 문화 · 관광 · 인적자원 연계 · 협력에 집중하되, 인공지능 중심 전략산업 지원도 확대하여 지역산업 융복합을 통한 첨단 신성장산업 육성을 강조 • 추진 전략 달성을 위해 영호남 동서 고대문화권 역사 · 관광루트,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밸리, 달빛예술 힐링체험공간 등 핵심사업 19건을 포함하여 87개 사업을 검토 · 추진할 계획

◈ 농업 · 농촌 동향

농식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20선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1.18.)

❍ [농식품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규제혁신 우수사례 20선 선정 · 발표, 2021.11.18.]
농식품 분야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국민과 관계기관에 공유 · 확산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2021 농식품 규제혁신 우수사례(20선)」 책자를 발간

▌규제혁신 우수사례 20선 목록▐

번호	과제명
1	• 미래 농업 · 농촌을 이끌어갈 스마트농업 확대
2	•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3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도입
4	•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운용 개시
5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6	•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 입주대상 확대
7	• 농지연금사업 가입대상자 확대
8	• 공익직불제 관련 농업인 자격증명 간소화
9	• 질병관리 등급제 도입
10	•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샌드박스 실증특례)
11	• 반려동물사료 즉석 조리 · 판매 서비스(샌드박스 실증특례)
12	•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확대
13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 확대
14	• 동물수분해장 세부관리기준 마련
15	• 태풍 · 질병 등 재난 발생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규정 신설
16	• 공사전 간척지 임시사용 허용용도 확대
17	• 계란껍데기(난각)표시 및 계란이력번호 표시 일원화
18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19	• 농업인안전보험 · 산재보험 등 적용대상 피보험자 범위 확대
20	• HACCP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간소화

- (미래 농업 · 농촌을 이끌어갈 스마트 농업 확대)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노지 · 축산 분야로의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등도 추진 중이며, 이와 함께 빅데이터 · R&D 등 스마트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가칭) 「스마트농업 육성법」도 제정 추진 중(2021.4월 입법예고)

※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021년 하반기부터 순차적 운영 예정, 2022년 상반기 완공 목표(~2021.하: 상주·김제, ~2022.상: 밀양·고흥)

※※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착공(2021.10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추진(6개소 선정) 등

정책동향

-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 추진)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를 위해 2020년 도입된 마늘·양파 등 농산물 온라인 거래를 확대※하고, 축산물도 온라인 거래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을 구축 중

  ※ 온라인 거래 현황: (마늘) 2020년 1,956톤(107억 원) → 2021년(11.12. 기준) 5,399톤(299억 원) (양파) 2020년 16,762톤(164억 원) → 2021년(11.12. 기준) 25,732톤(281억 원)

  ※※ 온라인 경매 운영방안 마련(2021.1월), 시스템 개발·완료 추진(2021.4월~12월)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도입) 고령자를 위한 유망 신산업인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도입·시행(2021.5)하여 관련 식품기업의 제품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

  ※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경도·점도),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

  ※※ 8개 기업의 27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을 최초 지정(2021.10.29.), 인증제 시행

- (농지연금사업 대상자 확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및 농업경영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만 65세 → 만 60세)할 계획, 65세 이전에도 자녀의 교육·결혼 등 목돈 마련이 필요하여 연령 하향을 요구해온 현장 목소리를 반영, 관련 법령을 개정 중

  ※ 농업인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

2021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결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1.15.)

○ [농식품부·대한상공회의소, 2021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2021.11.15.] '2021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 10건이 최종 선정, '본아이에프(주)'가 대상을 차지

- (개최 목적) 농업계-기업 간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업의 경쟁력 강화 유도

▌2021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 주요 내용▐

수상	기업·단체명	주요 내용
대상	본아이에프(주)	• 서산 로컬푸드 사용 HMR 등 신메뉴 개발 및 판매 – 기업–지자체–농가 3자 협력을 통한 지역 농산물 활용한 신메뉴 개발(육쪽마늘 등 지역 농산물 사용 3종 12억 원, 신메뉴 판매 273억 원) – 농가 조직화, 물량 규모화, 품질 균일화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 협력 기간 2년 6개월간 기업 총 매출 271억 / 농가 농산물 417톤, 12억 원 납품

정책동향

수상	기업·단체명	주요 내용
최우수상	농업회사법인 안동제비원	• 지역농산물을 100% 활용한 명인 수제 고품질 장류 – 지리적표시 및 상표 등록된 안동 생명콩 활용한 고품질 장류 제조 – 'DIY장만들기' 신제품 개발 및 SNS기반의 다채널 판로 개척 ※ 품목매출액: (2019) 5,366백만 원 → (2020) 5,830 → (2021p) 6,500
	영농조합법인 산골농장	• 친환경농산물(도라지) 계약재배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친환경 원물의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화 성공으로 상생 기반 확보 – 안정적인 농가 계약재배 물량 토대로 최근 5년간 신제품 74건 개발 ※ 총매출액: (2020) 4,284백만 원 → (2021.8.) 2,500 → (2021p) 5,000
우수상	농업회사법인 (주)네이처팜	• 원과와 부산물을 적극 활용하는 친농촌 사업모델 – 우수한 품질의 청도 반시(감) 원과를 안정적으로 확보, 가공하여 해외 수출 및 국내 B2B 판매 ※ 품목매출액: (2019) 5,500백만 원 → (2020) 6,900 → (2021p) 9,000
	한국인삼공사	• 『지리적표시제』 및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정관장 굿베이스] 제품 개발 – 무안 자색양파, 부안 오디, 제주 양배추, 브로콜리 등 지역특산물 계약재배로 고품질 건강즙 판매 ※ 전년 대비 자색양파 298%, 오디 204%, 적양배추 287% 추가 구매
	농업회사법인 (주)더불어실버팜	• 농부와 더불어 지역과 더불어, 더불어실버팜 – 꿀옥수수, 머루포도, 산딸기 등 지역특산물 계약재배 및 가공식품 개발 – 60세 이상 고령인력 적극 채용으로 노인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 ※ 품목매출액: (2019) 250백만 원 → (2020) 350 → (2021p) 600
장려상	㈜비지에프 리테일	• 기업과 지자체 간 상생협력 MOU를 통한 괴산군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 – 괴산군 수미감자, 대학찰옥수수, 고추, 배추 우수성을 팜아트 조성과 15,000여 개 전국 CU 점포 내 홍보물을 활용하여 홍보 – 환경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못난이농산물 사용 확대로 ESG 경영 실천 ※ 품목매출액: (2020) 108백만 원 → (2021p) 221
	농업회사법인 (주)떡찌니	• 국산 건강 원재료와 감성 먹거리 개발을 통한 안심 우리 떡 –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농산물 계약재배 지속적 추진하여 상생협력체계를 구축 – 유통채널 다각화하여 매출 확대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 (2019) 5명 → (2020) 7 → (2021.8.) 8
	(영)정읍명품 귀리사업단	• 생협과의 귀리 계약재배를 통한 제값 받는 고품질 농식품 생산 – 지역 농산물 전량 계약재배로 인한 지역 농가 수익 안정 및 증대화 – 소비자 조합원 생산지 관광 등으로 만족도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원료 공급실적: (2020) 1,495백만 원 → (2021.8.) 1,060 → (2021p) 1,500
	황산벌 농업회사법인	• CJ와의 상생협력으로 300호 지역 농가의 판로개척과 경작 비용 절감 – 계약재배 농가 추가 인센티브 지원 및 법인 보유 장비 활용 농가 부담 경감 (총 449백만 원) – 계약재배 전 농가가 GAP 인증 취득 등 기업에 안정적인 고품질 쌀 공급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발표회 결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1.17.)

○ [농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2021.11.17.] 2021년 11월 15일,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올해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참가팀 및 운영자에게 포상

※ '농촌에서 살아보기'(이하 '살아보기'): 2021년 도입된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으로, 귀농귀촌 실행 전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 참가자는 운영 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지내며 마을별 운영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 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 전반에 관한 밀도 높은 생활을 지원받음.

- (주요 내용) △ '농촌에서 살아보기' 도입 첫해 전국 88개 시·군의 104개 마을에서 총 631가구 참여(10월 말 기준), 이 중 48가구 농촌 전입

구분	합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참여시군	88	1	7	8	10	13	20	17	10	2
운영마을	104	1	7	14	11	15	20	20	14	2
귀농형	37	1	4	7	3	5	3	9	5	-
귀촌형	59	-	3	5	7	8	16	10	9	1
프로젝트참여형	8	-	-	2	1	2	1	1	-	1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요약 (참가팀·운영마을)▐

구분	주요 내용
□ 프로젝트참여형 참가팀	
최우수상 【당진 백석올미마을 참가팀】	• (운영기간·참가자) 2021.6.1.~11.31.(6개월) / 3가구 3명 • (프로젝트) 농촌에서 '로컬에디터'(지역농산물 판매기획자)로 살아보기 – 중소규모 농업인의 영농스토리, 생산물 등을 온라인 홍보 콘텐츠로 제작하여 직거래 플랫폼(사회적기업 '농사펀드' 협력)에 게시 – 홍보 마케팅을 통해 중소농가의 판로개척 지원 • (주요 성과) 지역 중소농가(10농가) 농산물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게시, 실 매출(23백만 원, 배·꽃·땅콩 등) 성과 ⇒ 참가자는 당진에서 '로컬에디터' 활동을 체험하며 농촌지역에서의 취업·생활 가능성 확인
우수상 【제천 덕산누리마을 '다다름팀' 】	• (운영기간·참가자) 2021.5.17.~11.6.(6개월) / 4가구 4명 / 전입 2가구 2명 • (프로젝트) 농촌에서 문화기획자로 살아보기 – 문화기획자로서 덕산면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개인프로젝트 및 팀 프로젝트(마을축제 기획·운영) 수행 • (주요 성과) 참가자 공동으로 '월악가을축제'(10월)를 기획·운영하고, 축제포스터 제작 및 음식레시피 개발·제공 등의 개인 프로젝트 완수 ⇒ 참가자는 지역(덕산면 월악리) 내 첫 소규모 문화행사를 진행하며 농촌지역 문화행사의 필요성·가능성 확인(참가자 1백 명 중 외부인 80명)

정책동향

구분	주요 내용
장려상 【완주 귀농귀촌협동조 합 참가팀】	• (운영기간 · 참가자) 2021.6.1.~10.14.(4개월) / 4가구 4명 • (프로젝트) 지역에 대한 이해를 통한 완주(두억마을)의 굿즈 개발 – 지역탐방 및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굿즈 아이디어 기획 및 상품 개발 • (주요 성과) 두억마을(체험휴양마을) 캐릭터(4종, 두꺼비 · 오동나무꽃 등)를 만들고, 캐릭터를 담은 단체복(티셔츠 · 조끼), 홍보물(사진엽서) 제작 ⇒ 참가자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농촌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든든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함.
입상 【함평 해당화마을 참가팀】	• (운영기간 · 참가자) 2021.5.11.~12.31.(6개월) / 4가구 5명 • (프로젝트)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상품 개발 및 체험카페 운영 – 지역특산물(해당화 · 허브)에 대한 이해(재배실습), 가공상품 개발, 바리스타 과정 수료 등을 통해 카페창업 및 운영 • (주요 성과) 참가자 전원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4종, 단호박머핀 · 해당화잼 등)하여, 제과제빵 · 바리스타 체험카페 '담담' 창업 및 운영(11.2.~) ⇒ 참가자는 프로젝트를 통해 익힌 기술을 활용하여 카페를 함께 운영,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 받음. ※ 운영자(해당화마을)가 지자체의 타 사업을 활용하여 유휴시설을 카페로 리모델링한 후 청년 일자리로 제공
□ 일반형 운영마을	
최우수상 【의성 일산자두골마을】 〈귀농형〉	• (운영기간 · 참가자) 2021.5.17.~9.17.(각 2개월) / 총 8가구 8명(기수별 4가구 4명) / 전입 4가구 4명 • (프로그램) 의성 대표작목(자두 · 마늘 등 10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 농작업근로, 귀농선배와의 간담회, 1:1 귀농컨설팅을 통해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마을이장과의 간담회, 지역탐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착 희망지역 이해 · 결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줌. – 특히, '친하게 지내자! 관공서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지원부 작성(읍면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은행 활용(한국농어촌공사), 조합원 가입(농협), 귀농지원정책(농업기술센터) 등 다양한 공적서비스와 지원정책 이해 · 습득을 지원 • (주요 성과) 의성군으로의 귀농 의향을 굳힌 3가구(3명)에 '귀농인의 집' 입주 지원, 1가구(1명)에게는 인근마을의 주거지 정보를 제공하여 이주 · 정착을 지원
우수상 【보성 다향울림촌마을】 〈귀촌형〉	• (운영기간 · 참가자) 2021.3.29.~9.30.(6개월) / 총 8가구 10명(6개월 4가구, 5 · 4 · 2 · 1개월 각 1가구) / 전입 4가구 5명 • (프로그램) 지역특산물(감자) 재배 · 수확 실습, 영농 신기술 현장방문(스마트팜 · 육묘), 선도귀농인 1:1 멘토링 등 영농관련 체험과 지역일자리(녹차가공 · 바리스타) 탐색, 지역민 간담회, 재능기부(판소리 · 친환경요리), 지역문화탐방(다도 · 염색) 등을 통해 농촌생활 전반에 대한 체험 지원 • (주요 성과) 정착 의사가 있는 참가자에게 주거 정보제공, 3가구(3명) 전입, 이 중 1가구는 농지구입 후 영농창업 준비 중이며, 부부 1가구는 인근지역으로 전입
장려상 【홍천 삼생마을】 〈귀촌형〉	• (운영기간 · 참가자) 2021.4.15.~10.15.(6개월) / 4가구 5명(전원 6개월) • (프로그램) 농업이해 실습(비닐하우스 설치 · 재배관리 등), 실습농장에서 홍고추 식재 · 재배 · 수확 · 가공 전 과정 체험 등 영농체험과 6차산업 현장 방문, 마을 내 · 이웃마을 · 인접 면 지역의 농작업 일자리 체험, 지역민 간담회, 재능기부(이발 · 장수사진 · 농기계 수리) 등 농촌지역 이해 · 교류 프로그램 운영

정책동향

구분	주요 내용
	• (주요 성과) 참가자 모두가 6개월간 체험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주에 관심(농지 · 주거 · 일자리 정보 요청), 마을에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김장나누기 행사(11월 예정) 초청 등 지속 관리 예정
장려상 【횡성 산채마을】 〈귀농형〉	• (운영기간 · 참가자) 2021.4.12.~10.12.(6개월) / 총 5가구 8명(6개월 4가구 7명, 2개월 1가구 1명) / 전입 1가구 1명 • (프로그램) 개인 텃밭 운영(1인당 30평, 옥수수 · 감자등 19개 품목), 텃밭 운영 교육(육묘 관리 · 병해충관리 · 출하방법), 텃밭 수확물 판매를 위한 장터 운영(체험휴양마을 내), 우수 농가 현장방문 교육(방울토마토 · 풋고추 · 양배추 등 11개 품목) 등 한 해 농사의 전 과정 경험을 통해 농업의 이해도를 높임. – 1,000평의 공동경작지에 옥수수, 감자, 고구마를 식재 · 수확하여 전국의 경매장(180박스) 및 직거래(85박스) 출하 등 영농 실전체험 유도 • (주요 성과) 1가구(1명)는 마을주민의 도움으로 마을 내 전입, 다른 1가구(1명)는 농지 구입하고 이주할 주거지 물색 중
장려상 【김제 수류산골마을】 〈귀농형〉	• (운영기간 · 참가자) 2021.4.15.~10.15.(6개월) / 3가구 4명(전원 6개월) / 전입 3가구 5명(1인체험 후 부부전입 가구 포함) • (프로그램) 개인별 전략작목(옥수수 · 참깨)을 선정하여 영농 전 과정 미션 수행, 선진농장 현장견학, 실용교육(용접기 · 하우스짓기 등)을 통해 귀농 정착 시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 및 기술 습득에 도움을 줌. – 특히, 귀농귀촌 정착 선배와 1:1 멘토링 제도로 개인별 전략작목 재배부터 수확까지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영농기술 및 역량 향상 • (주요 성과) 참가자 중 2가구는 농지를 확보하여 인근 마을로 전입, 영농창업 준비 중, 1가구(1명)는 '귀농인의 집' 입주 지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1.19.)

○ [농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2021.11.19.]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시행령…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시 관계 주민 의견 청취 절차 규정※, △시행규칙…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 의견 청취 대상인 관계 주민의 범위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혜자 및 해당 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 등으로 정함.

※ 목적외 사용허가 내용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공고내용: 목적외 사용 사유, 목적외 대상 시설 또는 용수의 양, 목적외 사용의 내용, 방법 및 기간

※ 의견이 있는 관계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

가상홍보 플랫폼 '욱 크래프트' 구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1.16.)

○ [농식품부, 가상홍보 플랫폼(욱 크래프트) 구축, 2021.11.16.] 농식품부는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업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구축형 가상홍보 플랫폼 '욱 크래프트※※' 를 공개(2021.11.16., www.wookcraft.kr)

※ 메타버스(Metaverse): 가공·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

※※ 욱 크래프트: 농업의 방향을 새롭게 전환한다는 의미로 '농'을 뒤집으면 '욱'이 되는 점에 착안(홈페이지: www.wookcraft.kr)

- (주요 내용) △ '욱 크래프트' 접속을 통해 농식품부, 농촌마을, 스마트팜 및 농업박물관 등의 다양한 농업·농촌 공간 체험 가능※, △MZ세대와 지속적으로 농식품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 이를 위해 각 부서가 '욱 크래프트' 를 홍보 공간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 함으로써 젊은 세대가 다양한 농업·농촌 정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 △한편, 「내 손으로 만드는 미래 농촌공간 공모전」 개최(2021.11.17.~12.3.)

※ 마인크래프트 계정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욱 크래프트' 접속을 통해 △농촌의 정서(생태농장) △농업기술의 진보(스마트팜, 유통센터) △과거, 현재, 미래의 농업·농촌 변화 과정(농업박물관) △미래 농촌 공간(농촌마을) 등을 체험

수확기 농가의 원활한 벼 출하 지원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1.15.)

○ [농식품부, 수확기 농가의 원활한 벼 출하 지원 추진, 2021.11.15.] 2021년산 쌀 생산량※은 388만 2천 톤(2021.11.15.일, 통계청 발표)으로 전년(350만 7천 톤) 대비 10.7% 증가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수확기 농가에서 원활하게 벼를 출하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업체의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3.3조 원→ 3.4)하고, 피해벼에 대해서는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할 계획

※ 재배면적: (2020) 726천 ha→ (2021) 732, 생산단수: (2020) 483kg/10a → (2021) 530

※※ (2015) 2.7조 원 → (2016) 3.0 → (2017) 3.3 → (2018) 3.3 → (2019) 3.3 → (2020) 3.3

※※※ 태풍·병충해 등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중 쌀 유통 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1월 15일부터 농가가 희망하는 피해벼 물량을 전량 매입

※※※ 지자체 조사 결과, 피해벼 수매 희망물량은 총 5,082톤(정곡 기준) 수준이며, 공공비축미 35만 톤 매입과 함께 피해벼를 매입할 계획(전북 2,510톤, 강원 965톤, 충남 754톤, 전남 605톤 등), 특히, 올해의 경우 제현율과 피해립 기준을 전년 보다 상향하여 최대한 많은 농업인이 피해벼 매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동계작물 재배용 요소비료 특별공급물량 배정·공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1.15.)

○ [농식품부, 동계작물 재배용 요소비료 2021년 11월 15일부터 지역별 특별공급물량 공급, 2021.11.15.] 농식품부는 동계작물 재배에 필요한 요소비료의 계약물량은 차질없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 2021년 11월 15일부터 특별공급물량을 배정·공급

- (주요 내용) 2021년 11월 12일 발표한 남부지방(전남, 경남, 제주)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 1,810톤을 지역별로 전남 959톤, 경남 172톤, 제주 679톤으로 결정하고, 2021년 11월 15일부터 해당 지역의 농협별로 순차적으로 공급 계획, △남부지방(전남, 경남, 제주)을 제외한 타 지역의 지역농협별로 비료생산업체와 계약한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분 요소비료의 잔여물량(370톤 수준)에 대해서도 연내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

구분	2021.11월~12월 공급 계약물량(A)	11월 10일까지 공급한 물량(B)	11월 15일 이후 공급할 물량(A-B)
전남	1,309	350	959
경남	400	228	172
제주	989	310	679
기타지역	875	506	370
합계	**3,573**	**1,394**	**2,180**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1.15.)

○ [농식품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2021.11.15.]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1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

- (주요 내용) △상황관리…재해대책상황실(4개팀) 구성·운영※, 24시간 상황관리, △공조체계…중대본, 지자체, 농촌진흥청·산림청·농협중앙회 등, △피해대응…관계기관 협력, 신속한 응급복구 및 피해지원 추진, △농가 홍보…TV, SMS, 마을방송 등 활용, 기상·예방요령 전방위 홍보

※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 대비 기간(2021.11.15.~2022.3.15.)

정책동향

〈최근 5년간 겨울철 피해발생 상황〉
◈ 농작물피해: (2016) 2,842ha → (2017) 438 → (2018) 6,296 → (2019~2020) – → (2021) 12,375
◈ 농업시설물: (2016) 143ha → (2017) – → (2018) 685 → (2019~2020) – → (2021) 114
◈ 복구소요액: (2016) 197억 원 → (2017) 12 → (2018) 377 → (2019~2020) – → (2021) 458

◈ 식품 동향

2021년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수상자 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11.17.)

❍ [농식품부, 2021년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수상자 선정, 2021.11.17.] 농식품부는 2021년 11월 15일, 「2021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결선 행사를 개최하여 최종 수상자를 선정

구분	상격	업체명	창업 아이템
대상	대통령	㈜에이비씨써클	현장에서 10분 이내 토양병해 진단 키트
최우수상	국무총리	㈜라피끄	맥주 부산물 활용 화장품 사업화
우수상	장관	㈜크래블	농기계 원격 점검 및 모니터링 종합 솔루션
		㈜팡세	바이오 프린팅으로 프리미엄 배양육 생산
입선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이사장	㈜에임비랩	축산사료량 통합관제 솔루션
		㈜루츠랩	배의 석세포를 추출하여 미세플라스틱 대체 친환경 소재 생산
		㈜AL네트웍스	곤충단백질(동애등에) 활용 반려동물 사료
		㈜오딧세이글로벌	스마트팜 식물공장과 과수재배용 IoT-LED lighting
		㈜에이지로보틱스	AI기반 다목적 과수농장 농업로봇
		영인바이오	지역특산물로 만든 강아지 전용라면

◈ 축산 동향

조류인플루엔자(AI) 주요 동향

자료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 행정안전부(2021.11.16.)

❍ [행정안전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재난안전 특교세 60억 원 지원, 2021.11.16.] 최근 충청북도 음성군 메추리 농장(2021.11.10.)과 육용오리 농장(11.11.)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긴급 지원

정책동향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충북 음성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2021.11.16.] 2021년 11월 16일, 충북 음성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2천 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4차※), 발생농장 등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

※ 사육농가 발생현황: (1차) 음성 메추리(2021.11.8.), (2차) 음성 육용오리(11.9.), (3차) 나주 육용오리(11.13.)

◈ 각 도별 동향

▌각 도별 주요 정책 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경기	• 경기도, 정부 상생지원금 이의신청자 대상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 기간 12월 말까지 연장(2021.11.16.) – 경기도는 2021년 11월 12일 종료 예정이었던 정부 상생지원금 이의신청 기간이 일부 연장되면서 이의신청이 진행 중인 사람들에 대한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간을 2021년 12월 말까지 연장 – 당초 도는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신청 기간을 12월 10일까지로 연장했었으며, 여기에 11월 12일 이전 출생 · 사망 추가 이의신청 미인용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해 모두 12월 31일까지로 재연장 – 신청은 2021년 12월 31일 낮 12시까지 가능하며, 마지막날 신청했을 경우 그날 오후 바로 카드사에서 지급 처리, 신청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사용기한은 연장 없이 12월 31일 종료 – 2021년 11월 15일 기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미인용자와 심사 중인 자는 3만 5,828건(미인용 3만5,468건 · 심사 중 360건)이며, 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했지만 지급 불능으로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미신청자는 1,048명으로 집계
강원	• 강원도, 미래 발전을 견인할 20대 대선 공약 제안 과제 발굴(2021.11.16.) – 강원도는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제안할 6개 분야※ 38개 과제를 발굴 · 확정 ※ ① 안정된 육아, 국가가 책임, ② 한반도 평화, ③ 강원도를 미래 첨단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 ④ 평화 · 폐광지역의 자립기반을 조성, ⑤ 청정 강원의 자원기반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여건을 마련, ⑥ 교통망 완성으로 평화 · 북방시대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 – (농 · 어업 청정 스마트화 기반 조성) ❶ 강원 해양레저휴양관광특구 조성※, ❷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❸ 동해안권 식품 · 생명 산업단지 조성※※※ ※ 레저(마리나, 다이빙, 서핑), 치유 · 문화관광 시설 등(2조 9,500억 원) ※※ 농업 바이오 클러스터, 스마트 복합도시 조성(8,500억 원) ※※※ 스마트 식품산업단지(기업, 연구소), 식품 수출거점 조성(2,000억 원) – 한편, 강원도에서는 2021년 11월 16일, 국회 각 정당을 방문하여 강원지역 대선공약 제안과제를 전달하고 당위성을 설명
충북	• 충북도, 먹거리 5개년 종합계획 발표(2021.11.16.) – 충청북도는 2021년 11월 10일, 충북 먹거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촉위원 위촉장 수여, ▲민간 공동위원장 선출, ▲충북 먹거리 5개년 종합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 ※ 충북 먹거리위원회는 2021년 상반기에 제정된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를 근거로 위촉위원 공개모집을 거쳐 2021년 9월 4개 분과 20명 규모로 먹거리 정책에 대한 결정과 발굴, 자문 역할을 수행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충북 먹거리 5개년(2022~2026) 종합계획은 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먹거리와 관련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5년간 43개 사업에 7천 5백억 원의 예산투입 계획
충남	• 충남도, 2021년 12월까지 농어민수당 2차 지급(2021.11.16.) – 충남도 내 15개 시·군 15만 9,000여 농·어가에 올해 2차 농어민수당※ 648억 원을 지급,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일정 기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에 실제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 검증 절차를 거쳐, 가구당 연 80만 원의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 ※ 2020년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 – 이번 하반기 2차 지급에서는 상반기에 1차 수령한 15만 7,000여 농어가에는 40만 원, 하반기에 신청한 2,000여 농가에는 80만 원을 일괄 지급, 현재 금산군에서 2021년 11월 10일 가장 먼저 지급을 시작했으며, 지급 준비를 완료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12월까지 지급 – 충남도는 2020년 15만 6,000여 가구에 1,253억 원을 지급했으며, 2021년에는 3,000여 농어가가 증가한 만큼 1,278억 원 규모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 • 충남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3,473억 원 2021년 11월 18일부터 순차 지급(2021.11.18.) – 충청남도는 2021년 11월 18일부터 도내 15만 500여 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확정된 3,473억 원을 지급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만 7,000여 농가에 688억 원, 면적직불금은 9만 3,000여 명에게 2,785억 원이 지급
전북	• 전북도, 강소권 메가시티구축 및 대응전략 논의(2021.11.15.) – 강소권 메가시티가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 11월 15일, 전북, 강원, 제주 3개 광역지자체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강소권 메가시티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비대면 회의를 개최, '강소권 메가시티 구축 및 대응전략'을 논의 – 정부는 2021년 10월 14일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이후, 후속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범부처 초광역 지원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11월 1일 개최된 지원협의회 1차 회의를 통해 산업, 공간, 인재 등 분야별 실무 TF※※ 구성 방안을 논의하였고, 강소권의 경우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에서 공동으로 지원전략을 검토할 예정 ※ 7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 초광역협력 산업(산업통상자원부), 공간(국토교통부), 인재(교육부), 사무이관 및 지원체계(행정안전부) 등 각 구성 – 향후에도 강소권 3개 광역지자체는 실무협의회 등 협력거버넌스를 통해 초광역협력을 위한 강소권 대응전략 세분화 및 공동 건의과제 등을 발굴 추진할 계획
전남	• 전남도, 청년 주도로 섬 폐교가 복합문화공간 탈바꿈(2021.11.15.) – 전라남도는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한 신안 안좌중학교 팔금분교의 '주섬주섬 청년마을'이 2021년 11월 12일 개소, 신안 청년마을 '주섬주섬'은 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작되었으며, 3년간 최대 6억 원이 투입 ※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 행정안전부가 2021년부터 3년간 전국 12개소에 총 60억 원을 들여 청년이 주도적으로 유휴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재창조하는 사업, 청년의 지역살이 경험을 나누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 주섬주섬 청년마을을 기획한 스픽스는 그동안 폐교인 안좌중학교 팔금분교에 우실동물숲과 청년작가 작품으로 꾸민 미술관, 책방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 특히 안좌도 빈집을 활용,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외지 청년 유입을 유도 – 전남도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청년마을이 지속 성장하도록 2022년에도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더 많은 청년이 전남에서 생활하도록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새롭게 추진·확대할 계획, 또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전남형 청년마을'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전남도, 전남농정혁신위원회 개최(2021.11.16.) – 전라남도는 2021년 11월 16일, 전남농정혁신위원회※를 열어 민선7기 주요 농정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와 함께 최근 전 세계적 이슈로 부상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농업축산 등 분야별 대응책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 ※ (탄소중립과 관련) 지역별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시책을 추진하는 제도마련 및 예산지원을 주문, 또한, 기후환경에 대한 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기후대응기금 도입,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개발 확대 등 다방면에 걸쳐 폭넓고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관련) 최근 정부가 가입 여부를 타진한 CPTPP과 관련해선 최근 동향 및 농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영향, 전남도 대응 방향을 논의
경북	• 경북도, 농특산물 품앗이 완판운동 시즌II 전개(2021.11.15.) – 경상북도는 경북형 상생협력모델인 농특산물 품앗이 완판 운동 시즌II(이하 '완판운동 시즌II')를 지난해에 이어 대대적으로 전개해 연일 완판※ 행진 ※ 완판운동은 농특산물 판로를 모색하는 한편 생산자는 제 값에 팔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는 착한가격 착한소비 일환으로 마련 – 2021년 11월 5일 기준 완판운동 시즌II 추진 결과는 '사이소' 등 온라인 행사로 394억 원, 대형유통업체 등 오프라인 행사로 1,303억 원을 판매해 2020년 말 1,157억 원 대비 47% 상승한 1,697억 원을 달성 – 경북도는 농특산물 품앗이 완판운동을 지역 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도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판매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연말에 시상할 방침
경남	• 경남도, 경남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 발행(202.11.16.) – 경상남도는 경남형 민관협력 배달앱과 e경남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경남사랑상품권, '경남e지'를 2021년 11월 17일 오전 10시에 발행 – ('경남e지') 기본 할인율은 10%이나, 온라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 할인 판매, 1인당 구매한도는 50만 원이고 사용기간은 1년, 경남형 민관협력 배달앱과 e경남몰 등 지정된 온라인 가맹점에서만 결제할 수 있으며, 산청군의 대표 쇼핑몰 '산앤청'에서도 2022년 초 개편 후부터 사용가능, 향후, 시·군의 온라인 지역몰 등으로 그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 – ('경남형 민관협력 배달앱') 2021년 9월부터 시행 중인 '경남형 민관협력 배달앱'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관협력 배달앱에 경남사랑상품권을 탑재한 것으로, 기존 거대 배달앱의 6~12%에 달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을 2% 이하로 대폭 인하, 진주시 '띵동', '배달의진주', 김해시 '먹깨비', '위메프오', 통영시 '띵동'이 서비스 중 – (e경남몰) 도내 안심 농·수·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e경남몰도 2021년 7월 전면 개편 이후 사용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수를 2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모바일 전용앱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입점업체와 매출액이 크게 증가
제주	• 제주도,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2건 선정(2021.11.17.) – 제주특별자치도의 2개 과제※가 행정안전부의 '2021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 ※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과제 '중산간마을 행복치안센터 운영' ※※※, 서귀포시 '3安(안전·안심·편안) 수학여행 서비스 디자인' ※※※※ ※※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공무원이 정책과정 전반에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서비스 디자인 기법을 적용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국민 참여형 정책모델 ※※※ 제주시 구좌읍 송당마을을 배경으로 자치경찰이 행정·치안 서비스에서 소외된 중산간 지역 현안 해결방안을 주민들과 함께 모색해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중점 ※※※※ 세월호·코로나19로 제주 안전 관광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 및 관광업계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안전·안심·편안한 수학여행 상품을 발굴

자료: 각 시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정리·작성

아젠다발굴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주요 결과 외

[기획] 기후변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주요 결과

※ 관계부처 합동으로 게시한 보도자료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폐막"(2021.11.14.)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의장국: 영국)는 **197개 당사국 정부대표단**을 **포함**하여 **산업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4만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2021년 11월 13일** 오후 23시 30분 경(영국 현지시각 기준) **폐막**※

※ 당초 폐막일 2021년 11월 12일

- 특히, 2015년 당사국총회 이후 6년 만에 개최된 **특별정상회의**(2021.11.1.~2.)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20개국 정상들**이 모여 **지구온도 1.5℃ 이내 상승 억제**를 위한 **범세계적 기후행동 강화**를 **약속**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주요 결과 및 의의〉

①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

❍ 이번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대표 결정문**으로 **선언**하고, **적응재원**※, **감축**※※, **협력** 등 분야에서 각국의 **행동**을 **촉구**

※ (적응재원) △선진국들의 적응재원·역량배양·기술이전 대폭 확충 촉구, △선진국의 적응재원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2배 확대 공약 환영, △다자개발은행, 금융기구 및 민간의 기후재원 동원 촉구 등

※※ (감축) △2030까지 메탄 등 non-GHG 감축 검토 요구, △청정발전 확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및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촉구 등

- 특히, 협력 분야에서는 당사국 총회 개최국에게 **「청년기후포럼」**※을 **연례 개최**토록 **요청**하는 것으로 **합의**

※ 한국 측이 적극 제안하여 결정문에 포함(2021.11.1. 문재인 대통령은 COP26 기조연설에서 청년기후서밋 연례 개최 제안)

아젠다 발굴

② 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 이번 당사국총회의 최대 성과는 지난 6년간 치열한 협상을 진행했던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하여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Paris Rulebook)을 **완성**※

※ 제24차 당사국총회(2018, 폴란드)에서 탄소시장 지침을 제외한 8개 분야 16개 지침 채택을 채택, 제25차 총회(2019)에서도 제6조 지침 미타결

-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국제 감축실적의 상응조정(이중사용 방지) 방법은 미국 등이 제안한 중재안이 당사국들의 동의를 얻어 합의도출에 성공

- **감축실적**을 국제적으로 이전·사용 시에는 **상응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6.4조 감축실적 중 기타목적**※(other purpose)으로 **허가**된(authorized) **실적**은 **상응조정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허가되지 않은 기타목적**의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상응조정 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 NDC로 사용되는 목적 외 민간이 자발적 탄소중립 달성 공약을 위해 6.4조 감축 실적을 구매하는 경우 등으로 예상

- 또한, **2021년 이전 발급**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감축실적**(CER)에 대해서는 **2013년 이후 등록**된 **사업**에 한하여 **1차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유치국은 동 감축실적 사용 시 상응조정**을 **유예**

- **협정 6.2조**(협력적 접근법)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을 **적응재원**에 **활용**하는 것은 **사업 참여국**의 **자발적 공여**를 **공약**하는 것으로 **합의**

- **6.4조**(CDM이후 체제)에서는 **감축실적**에서 **5%**를 **의무적**으로 **공제**하여 **적응재원**으로 **사용**하고, **전 지구적 전반적 감축**(OMGE※)을 위해서 **감축실적**의 **2%**를 **취소**(cancellation)하는 것으로 결정

※ 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s: 탄소시장의 활용이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기존 CDM에서는 감축실적의 보수적 산정을 통해 입증

- 다만, 상응조정 방법론 정교화, 제6조 사업 감독·관리 체계 마련 등 **후속작업**이 **필요**하여 **탄소시장**이 **온전히 운영되기까지**는 **일정기간**(약1~2년)이 **소요**될 전망

③ 투명성

❍ 이번 총회에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투명성 의제**는 **격년투명성보고서**※ **구조**와 이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교육과정 개발** 등에서는 **협상 초기**에 **합의**

※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모든 당사국이 2024년부터 격년 주기로 작성·제출

아젠다 발굴

- 그러나, **3대 보고분야※ 보고**를 위한 공통표양식 개발 협상은 막바지까지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개도국**에 대해서 **유연성**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수용**되어 최종 합의

※ ①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② NDC 이행·달성 경과, ③ 지원(재원·기술·역량배양) 제공

④ 적응 및 손실과 피해

❍ 전 지구적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진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글로벌적응목표※**(Global Goal of Adaptation, GGA)에 대한 **방법론**, **지표** 등을 **개발**하는 **작업※※**을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SBSTA, SBI) **주관 하**에 **2년간 진행**하기로 결정

※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기후회복 탄력성 제고, 기후변화 취약성 완화

※※ 글래스고-샤름엘셰이크 GGA 작업프로그램

-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는 **산티아고네트워크※ 기능 확대**에 대해서는 **개도국 요구**가 **일부 수용**되어 **기술, 재정** 등 **지원**에 대한 **접근성**(access)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티아고네트워크**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 기후 취약국의 손실과 피해를 방지·최소화·해결을 위해 조직·기관·네트워크와 전문가들의 기술지원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COP25, 마드리드)

- 아울러,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술지원을 촉진하는 **재원 신설**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의**하였으며, **감축, 적응재원** 등과 **독립**된 **손실**과 **피해 재원 신설 여부**는 **논의기구**(Glasgow Dialogue)를 **설치**하여 **2024년 6월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⑤ 기후재원

❍ 기후재원 논의에서는 선진국들의 약속한 **장기재원 조성 목표※**를 **여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개도국들**이 **강하게 비판**하였고, **선진국들**은 **2025년**으로 **연장**된 **해당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천억 달러를 조성하는 것에 합의(COP16)하고 이를 2025년까지 연장(COP21)

※※ OECD 측정 기후재원 규모(억 달러): (2016) 586 → (2017) 712 → (2018) 789 → (2019) 796

- 또한, 선진국은 **적응분야 지원**을 **2025년까지 최소 2배**로 **늘리는** 등 적응재원에 대한 지원을 상당 수준 확대하여 **개도국**의 **기후대응 지원 시 감축**과 **적응 간 균형**을 **확보**해야 함에 주목

아젠다 발굴

- 이외에도 당사국들은 **2025년 이후**의 **신규 재원 조성**에 관한 **논의**를 **개시**하여, **2024년**에 **동 목표액**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기술전문가회의 및 고위급 장관회의**를 **2022~2024년간 개최**하는 것에 합의

⑥ 국가감축목표(NDC) 공통이행기간

○ 일부 개도국들이 강하게 반대하던 **국가감축목표**(NDC) **공통 이행기간**은 **미국**과 **중국**이 **5년**의 **이행기간 설정**에 **합의**※함으로써 협상 돌파구를 마련, **모든 당사국**이 **동일**하게 **5년 주기**의 **국가감축목표 이행기간**을 **설정**하도록 **독려**(Encourage)

※ 2025년에 2035년 국가 감축목표, 2030년에 2040년 국가 감축목표를 제출, 이후 매 5년 마다 차기 국가 감축목표 제출

⑦ 기술지원

○ 기술지원 의제 중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의 **재정 부족 해결 방안**에 대해 선진국-개도국 간 이견이 가장 컸으며, 특히 **기술-재정 메커니즘 연계 의제**는 합의되지 못하고 **2022년 6월 부속기구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 그 외에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이사회 구성 신규 규칙,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운영기구(UNEP) 운영 기간 연장 등은 합의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 주요 내용>

○ **[과학 및 시급성]** △COP27 시 IPCC 보고서 제출 요청, △1.1℃ 기온상승이 인간 활동에 기인 우려 표시, △감축, 적응, 재원분야 목표 및 행동 상향 시급성 강조

○ **[적응]** △재원·역량배양·기술이전 포함 적응 행동 및 지원 시급성, △국가적응계획(NAP) 제출 환영, △COP27 전까지 IPCC AR6 제2작업반 보고서 제출 기대

○ **[적응재원]** △선진국들의 적응재원·역량배양·기술이전 대폭 확충 촉구, △충분하고 예측 가능한 적응재원의 중요성 인식, △선진국의 적응재원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2배 확대 공약 환영, △다자개발은행, 금융기구 및 민간의 기후재원 동원 촉구

아젠다 발굴

○ [감축] △1.5도 목표 실현을 위한 CBRD 원칙 및 과학에 기반한 행동상향 필요, △2030까지 메탄 등 non-GHG 감축 검토 요구, △청정발전 확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및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촉구, △산림, 해양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의 중요성 강조

○ [감축과 적응을 위한 재원·기술이전·역량배양] △2020년 연간 1천억 달러 미달성에 깊은 유감 표명, △2025년까지 연간 1천억 불 목표 시급한 달성 촉구, △공적·민간 재원 조성의 중요성

○ [손실과 피해] △손실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원·기술이전·역량강화의 중요성 재강조, △산티아고 네트워크(SN)의 실행화를 위한 진전 환영

○ [이행] △협약 下 잔여 의무의 이행 강력 촉구, △탄소흡수원 보전을 고려한 정책 조율 독려, △지속가능한 성장과 빈곤퇴치를 촉진하는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의 필요성 인식

○ [협력] △시민사회·원주민·지역사회·청년 등 非당사국 이해관계자의 역할 인식, △COP 개최국이 「청년기후포럼」을 연례 개최 토록 초청※ △ACE※※에 관한 글래스고 작업프로그램의 조속한 이행 촉구

※ 한국 측이 적극 제안하여 결정문에 포함(2021.11.1. 문재인 대통령은 COP26 기조연설에서 청년기후서밋 연례 개최 제안)

※※ (Action for Climate Empowerment) 교육·훈련, 공공참여, 정보공개 및 국제협력을 통해 기후행동에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 강화 목적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6조 및 12조 이행을 위해 도입된 개념

<제6.4조 국제탄소시장 운영규칙 주요 내용(2021.11.13. 14시 기준)>

○ [운영 체계]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의 총괄 하에 감독기구(Supervisory Body, SB)를 통해 주요 사항 이행

○ [SB 구성] UN 5대 지역그룹※ 각 2인, 최빈국 1인, 군소도서개도국 1인 총 12인 (동수(12인)의 대체 위원도 선정)

※ ① 아프리카, ② 아시아·태평양, ③ 동유럽, ④ 중남미 및 카리브해, ⑤ 서유럽 및 기타

- (SB 기능 및 역할) 제6.4조 메커니즘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 △사업 등록, △감축 실적(A6.4ER※) 발행, △지정운영기구(제3자 검증 기관) 인가 등을 승인

※ Article 6, paragraph 4, emission reduction

아젠다 발굴

○ [사업등록] 사업참여자는 감축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기구에 사업승인을 요청, 승인을 득한 경우에 정식으로 사업등록

※ 감축량의 정량화를 위하여 감독기구가 승인한 방법론만을 사용하며, 방법론이 부재한 경우에 신규 방법론을 개발

○ [사업 기간] △갱신 사업의 경우 기본 최대 5년 및 갱신 2회(최대 15년), △未갱신 사업은 최대 10년, △흡수원 관련 사업은 기본 최대 15년 및 갱신 2회(최대 45년)

※ 유치국은 상기 보다 짧은 사업기간을 설정·승인 가능, 사업기간은 2021년 이후만 인정

○ [실적 검증] 등록된 사업을 통한 감축량을 대상으로 감축 실적 발행을 위하여 실적을 검증하고 감축실적 발행을 요청

○ [실적 발행] 감독기구는 사업참여자의 감축 실적에 대해서 승인하고 메커니즘 등록부로 발행

이슈 브리프 RCEP 영향평가의 농업 부문 주요 결과와 향후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RCEP 영향평가의 농업 부문 주요 결과와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1891호, 2021.11.8.)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2020년 11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ASEAN 10개국과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을 타결하였으며, RCEP의 비준동의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

○ 비준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RCEP 영향평가 결과』(이하,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농업 부문에서는 협정 발효 후 20년간 농업생산액이 연평균 77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이런 분석 결과에 대해 농업계에서는 예상 피해 규모가 과소평가 되었다며 농정당국와 농업계의 시각차가 큰 상황, 이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를 적절하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

〈농업 부문 영향평가의 주요 결과〉

○ 우리나라와 다른 RCEP 회원국들 간의 농림축산물 교역액은 2017~2019년 평균 약 179.6억 달러(수출 약 42억 달러, 수입 약 138억 달러)로 전체 교역액 중 3.45% 수준

아젠다 발굴

○ RCEP 회원국들과의 전체 교역이 **2010년 이후 흑자**로 **전환**된 데 반하여, **농림축산물 교역**은 **적자**가 **지속**되어 적자 폭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꾸준히 확대**

- 농업 부문의 RCEP 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존의 교역 추세를 기준(baseline)으로 한 전제 위에서 RCEP의 예상 파급효과를 추정

- **일본**을 **제외**하면 이미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로 그 영향은 이미 지금과 미래의 교역 추세에 반영되는 것을 상수로 보아 **기체결 FTA**와 **RCEP**의 **양허안 차이**에 따른 **추가적**인 **영향만**을 **제시**

○ 우리나라는 RCEP 협상에서 **전체 농산물 세번**(稅番)의 **63.4%**에 해당하는 **총 1,029개 세번 품목**의 **관세**를 **20년 내**로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ASEAN 10개국**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60~147개 세번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추가 개방**, **일본**의 경우 **농업 부문**에서 **총 655개※ 세번**에 해당하는 **품목**을 **처음**으로 **개방**, 이는 전체 농산물 세 번의 40.4%에 해당하는 수준

○ 이러한 개방 시나리오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한 결과, RCEP 발효 후 우리나라 **농업생산액**은 **20년간 연평균 77억 원**, **20년 누적 1,531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열대과일류 수입 증가**로 **국내 과일 생산액**의 **감소분**(연평균 40억 원)이 전체 농업생산액 감소분의 **52.5%**에 이를 것으로 추정, 그 외에 품목별 생산감소 예상치는 아래 표를 참고

▌RCEP의 농업 부문 파급영향 분석 결과(단위: 억 원)▐

구 분	1년차	5년차	10년차	15년차	20년차	20년 누적	20년 연평균
전체	-9.2	-36.7	-79.7	-116.6	-122.6	-1,531	-77
곡물	-1.3	-7.1	-13.3	-19.2	-18.3	-253	-13
채소(과채)	-0.8	-4.8	-12.1	-19.0	-21.1	-240	-12
과일	-1.6	-17.8	-44.1	-63.5	-62.6	-806	-40
축산	-0.0	-0.5	-1.1	-2.1	-2.3	-26	-1
기타	-5.5	-5.9	-6.5	-6.6	-6.6	-126	-6
- 차	-5.5	-5.9	-6.4	-6.3	-6.3	-122	-6
녹용	-0.0	-0.6	-2.6	-6.2	-11.8	-80	-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RCEP 영향평가 결과』, 2021.9.,p.242.

아젠다 발굴

○ 물론 RCEP을 통해 우리에게 **추가**로 **개방**된 **신선 농축산물**도 있는 만큼 이들 품목의 경우 **역**으로 **수출**의 **증대**를 **기대**해볼 수도 있는 상황

- 정량분석이 수행된 것은 아니나 **영향평가 결과**에서는 **주로 온대성 과일**(배, 감, 딸기 등)이나 **과채류**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영향평가 결과 해석 및 활용의 주의점>

○ 농업 부문 영향평가 결과, 특히 관세 인하의 파급영향 부분을 다룰 때 기본적으로 유념할 사실은 상술한 바와 같이 피해 규모의 추정치가 RCEP 발효에 따른 '추가적인' 생산액 감소분을 의미한다는 점

○ 우리나라는 이미 RCEP 외에도 57개국과 17건의 FTA가 발효 중으로 이에 따른 시장개방과 농업 부문 생산액 감소가 지속

○ 이번 **파급영향 분석**은 이러한 시장개방 역사에 따른 농업생산액 감소 수준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관세 인하 일정**에 **RCEP 발효**가 **추가**됨으로써 **발생**할 **효과**만 **정량화**한 것임에 유의할 필요

○ 그러나 이것이 영향평가 시 일반적인 방법론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방법론이나 분석 모델 자체가 갖는 한계가 함께 고려될 필요

○ 우선 현재 시점의 **품목 간 대체·보완 수준**이나 **생산기술 수준**, **시장 구조** 등이 앞으로도 **유지**되거나 **변하더라도 현 트렌드**의 **연장선**에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는 점

○ 정량화하기 어려운 **정성적 영향요인**이 **모델**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주의, 상황에 따라 그러한 정성적 요인의 파급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 예측 노력을 기울이거나 적어도 **정성적**인 **설명**을 보다 **보완·강조**할 필요

○ 또한, **농업 부문 파급영향**은 국제시장이나 제조업, 서비스업 등 **비농업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변수들**이 **외생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영향평가 결과, p.232.)로 **농업 부문**의 **변화**가 **농업 바깥**의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가 다시 **농업 부문**으로 **환류**되는 **효과**는 **고려되지 않았음**.

아젠다 발굴

〈향후 과제〉

○ RCEP 영향평가의 농업 부문 주요 결과를 바라보는 **농정당국**과 **농업계**의 **시각차**가 **커 이견**을 **좁히고** 앞으로 개방도가 더욱 높아질 **농산물 교역 환경**의 **파고**를 **민·관**이 **협력**하며 함께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

○ 첫째, **민·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양방향 소통**이 필요, **예상**되는 **영향**을 과장하지 않되 **모델**의 **한계**에 대한 **고려**와 **농업 현장**의 **체감**에 대한 **존중**이 **상호소통 과정**에 **수반**

○ 둘째, 영향평가가 품목별, 지역(산지)별로 구체적인 수준까지 분석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는 작업은 아니므로, **민감품목**의 경우 보다 **정밀**한 **단계**의 **부분균형분석**이나 **정성분석** 등이 연이어 **수행**될 필요

- 경제학적 방법론에만 기대기보다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의 **현지 동향 모니터링**, **열대과일 전문 바이어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

○ 셋째, **RCEP**의 **관세 인하 효과**는 **기존 추세**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부분**에 한해 **분석**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책**은 보다 **포괄적**인 **수준**에서 **강구**될 필요

- 기체결 FTA뿐만 아니라 한-필리핀 FTA,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을 모두 감안할 때 무역협정별 대책을 따로 세우기보다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의 **피해보전 및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이 **긴요**한 **시점**

○ 마지막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힘쓸 필요, 기존 FTA뿐 아니라 RCEP으로 발생하는 **무역 이익**의 **일부**가 **효과적**으로 **농어업 부문**의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을 **점검·개선**할 필요

※ 이 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기업 기부금으로 10년간 총 1조 원을 조성하고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말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1년 9월까지의 출연금액이 1,467억 원에 불과할 만큼 기금 조성이 여의치 않은 상황

- 특히, **RCEP**의 **개방 수준**과 **역내 적용 규범**으로 인해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의 **기금 출연 방안**을 **적극 모색**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무부 기후변화 대응 정책 I

※ 미국 농무부의 "ACTION PLAN FOR CLIMATE ADAPTATION AND RESILIENCE" (2021.8.1.)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농무부 기후변화 대응 정책 I

○ **미국 농무부**는 **2021년 1월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외 비전**과 **계획**에 맞추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구성**하였음.

- 미국 내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미국 전체의 대응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농무부는 타 연방 기관과 다르게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도시, 농촌, 원주민 사회** 모두를 **아우르는 계획**을 세워야 했음.

○ **농무부**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5가지 주요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1. 농업 생산성 악화) 토양**의 **질 악화**, **병충해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작물**과 **가축**의 **생산성**이 **낮아져 높은 농산물 가격**뿐만이 아니라 **농업 보험**에 **많은 보조금**이 **필요**할 것임.

- **(2. 수자원 양과 질 위기) 가뭄** 등으로 **수자원**의 **양**과 **질**이 **위협**받게 되며, **산림**의 **회복력**이 **감소**함에 따라 **다양**한 **재해**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 **(3. 취약 공동체에 대한 비대칭 영향) 저소득**, **소수자**,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식량**, **건강**, **극한 기후 피해**를 더 심하게 입는 **취약 공동체**이며, 기후변화로 인해 이러한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4. 극한 기후로 인한 충격) 허리케인**, **홍수**, **산불** 등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으며, 농촌지역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 현재 고용, 소득, 인프라 및 연결성 개선과 같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극한 기상 현상**으로 인해, **건축 과정**이나 **시설물 피해**가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인구 감소**와 더불어 농촌의 **농업·임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5. 인프라와 공공용지 피해)** 기후변화 영향의 빈도, 강도, 부정적인 영향이 강해지고 있어, **인프라 개선**, **산불 피해** 및 그 영향으로부터의 **회복** 등 **산림**과 **농촌 전체**의 **회복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함.

아젠다 발굴

○ 이에 대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5가지 행동계획**을 **발표**함.

- **행동계획**은 **2022년 대통령 재량 펀드**와 **미국 농무부 산하기관**에서 **정책 자금**을 지원받기로 함.

- 특히, **Climate hub**를 **강화**하여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대응 기술 교육** 및 **확산**을 **강화**하고자 함.

▌미국 농무부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계획▐

행동계획	정책 범위 및 대상	정책 성과(예상)	정책 자금 지원
토양과 산림의 회복력 강화	- 전 국토 산림 및 토양 - 취약 지역에 집중	- 토양 데이터 수집 - 기후변화 적응 모니터링 - 산불 발생 위험 축소	- 2022년 대통령 재량 펀드 - FS - NRCS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	- Climate hub가 담당하는 지역	- 지역 혹은 지역 간 공통 관심사 연구 및 기술 지원	- 2022년 대통령 재량 펀드
지역 단위 기후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확대	- 연방 기후 데이터	- 기후변화 데이터 근성 강화 (2021-2025) - 지역 수준의 데이터 제공 - 농업, 임업에 활용 - 온라인도구 개발 (2022-2023)	- ARS - ERS - FS - NASS - NIFA - NRCS - OCS 등
기후변화 대응 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 확대	- 농무부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 연구, 교육	- 포장 단위부터 전국 단위의 기술 평가 -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기후 변화 적응 기술 교육 및 확산 - 국제적 파트너십	- USDA Global Change Task Force 등
Climate hub 강화	- Climate hub	- Climate hub의 교육, 네트워크, 연구 확대 - Climate hub의 정기적 보고서 발행	- 2022년 대통령 재량 펀드

■ 자료 출처:
https://www.usda.gov/

아젠다 발굴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디지털 전원(田園)도시 국가 구상 실현회의 개최

※ 일본 내각관방 "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実現会議(第１回)" (2021.11.11.)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디지털 전원(田園)도시 국가 구상 실현회의 개최

○ 일본 정부는 2021년 11월 11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방 활성화**를 **논의**하는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실현 회의**를 진행하였음.

- **지방**에서 **디지털 구현**을 통해 **도시**와 **차이**를 **줄여 도시**의 **활력**과 **지방**의 **여유** 모두를 누릴 수 있는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실현을 도모함.

<디지털 구현을 통해 해결이 기대되는 지방 활성화 과제>

○ **도쿄권 전입 초과수**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경향**을 보여 왔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젊은 층**의 **전입 초과 경향**은 **지속**되고 있음.

○ **도쿄권 전입 초과 배경**에는 **일자리·수입 및 교육·육아, 의료 기반** 등 **지방**의 다양한 **과제**에서 **기인**하며 이러한 **과제 해결**이 **필요**함.

- **(지방 주요 과제)** △**일자리 확보**, △**성장 산업 창출**, △**교통 및 물류 확보**, △**교육 기회 충실**, △**의료·복지 충실**, △**문화·오락 충실** 등

<디지털화를 통한 지역 과제 해결 사례>
◈ **후쿠시마현 아이즈와카마쓰시 ICT 사무실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확보'**
• 디지털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해 도시를 활성화하고 생활 편리성을 높이는 '스마트 시티 아이즈와카마츠' 추진
• ICT를 활용한 오피스 'AiCT'를 정비하여 일본 국내외 37개 사에서 200명이 넘게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쵸 원격 쌍방향 라이브 수업을 통한 '교육 기회 내실화'**
• 화상 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 학생과 도쿄에 거주하는 대학생 강사 간 원격 쌍방 소통 수업 시행
• 지방에서 도시와 같은 수준의 학습환경이 정비되어 도입 후 3년간 전국 학력 테스트에서 전 과목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의 효과 발생
◈ **나가노현 이나시 의료×MaaS에 의한 '의료 충실'**
• 간호사와 함께 의료기기를 갖춘 이동 진찰 차량에서 화상 통화를 활용하여 의사가 원격지에서 환자를 진찰
• 배차 시스템을 통해 환자와 의사가 합의한 일정에 따라 효율적인 경로로 환자 자택을 순회하며 환자, 의사 쌍방의 부담을 경감

아젠다 발굴

〈향후 논점〉

○ [지방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구현] △지방 일자리 확보(지방창생 재택근무 등), △성장 산업 창출(지역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신산업 창출, 스마트 농업 등), △교통·물류 확보(MaaS의 추진, 드론, 정보 코드 통일 등), △교육 기회 및 의료·복지 등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공공 서비스 내실화, △슈퍼시티 구상 조기 실현 등

○ [디지털 인재 양성·확보] △지역에서 활약하는 디지털 인재 확보와 공조 커뮤니티 양성, △의욕이 있는 지방대학, 고등전문학교 등을 중심으로 한 인재 선순환 확립 등

○ [지방을 지탱하는 디지털 기반 정비] △데이터 연계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 등 민관 협조형 디지털 기반 정비 가속화, △5G, 데이터센터, Wi-Fi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 인프라 정비 가속화, △새로운 서비스 실현 및 인재 육성·활용을 위한 제도 개혁 실현, △첨단 서비스에 필요한 툴·지식 등 개발 및 지방 도입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실현] △디지털 추진위원의 전국적인 추진, △이재민·고령자 등에 대한 디지털 활용 지원, △주민 디지털화에 대한 이해·공조 촉진

■ 자료 출처:
https://www.cas.go.jp/jp/seisaku/digital_denen/index.html

언론 동향 2022년 대선 농정공약 주요 동향

※ 아젠다 발굴을 위해 주요 일간지와 농업전문지에 기고된 내용을 근거로 농업·농촌 관련 쟁점 및 이슈, 주요 농정현안에 대응하고자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대선 농정공약 주요 동향

○ 제26회 농업인의 날(2021.11.11.)을 맞아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농촌기본소득 도입, △월 30만 원 농업인기본소득 지급, △농산어촌 녹색대전환, △농업예산 확대, △농업소득 향상 외 다양한 농정공약을 제시

〈국민의당〉

○ 국민의당은 2021년 11월 11일, 안혜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농업은 국가 존립과 직결된 기간산업이자 식량안보의 최후의 보루" 라고 강조하고, "최근 많은 나라들이 무역의 국경을 높이면서, 우리 당에서 생산한 우리 먹거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고 언급

아젠다 발굴

○ 이어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를 맞아 우리나라의 농업도 농업인 분들의 적극적 협조를 바탕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청년창업농 육성** 등으로 **선진화**되고 있다” 면서 “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 농촌지역 고령화** 및 **공동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도 많다” 고 지적

○ 안혜진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농촌과 농업의 현안을 세심히 살펴 농업인 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걱정 없이 농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자원위기, 식량위기**에 앞장서 **대응**해 나가겠다” 고 약속

〈국민의힘〉

○ 국민의힘은 2021년 11월 11일, 수석대변인 이양수 의원의 논평을 통해 “**국가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3%**가 **되지 않고**,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현 정부 들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면서 현 **정부**의 **농업 홀대**를 지적

○ 이어 “**도농 간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농업인 수**는 **급감**하는데 **고령화**마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며 “무엇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고 강조

○ 그러면서 “**코로나**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어려운 **농업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 **농업인들**의 **권익**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혀

○ 또한, “농심이 천심임을 잊지 않겠다” 면서 “**농업**이 명실상부한 **미래산업**의 한 축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약속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21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을 맞아 농민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농업이 **식량안보 산업**이자 **생태환경산업**이라는 소신과 함께 **농촌주민기본소득 추진**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농업은 한때 사양산업으로 천시됐지만 환경지킴이 **녹색산업**이자 **식량안보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며 “농촌과 농민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실천하겠다” 고 언급

아젠다 발굴

- 아울러, **당면 현안**인 **요소 수급**과 **관련**해선 "2022년 농사 시작 전까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중동산 구매 확대** 등 **수입다변화**를 **추진**하겠다"며 "**비료가격 인상**으로 농가가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혀

- 특히, "전략안보산업으로서 농업과 농촌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농촌기본소득은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 **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

○ 한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농업예산 확대**, △**농지 소유·이용 실태 전수조사**, △**청와대 농업수석 신설**(농해수비서관 승격), △정부·지방자치단체 여성농민 전담조직 격상·신설, △**농촌 정주 인프라 개선**, △대통령과 **농업계**의 **소통 확대** 등 **정책현안**을 **건의**

〈새로운물결〉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2021년 11월 11일, 자신의 SNS에 〈농업인의 날, 농민들을 만나러 간다〉는 글을 올리고, 전남 광양과 순천, 여수 등을 찾아 농협의 '가래떡데이' 행사를 방문

○ 글에서 "농사짓기가 편해야 하고(편농, 便農), 농민 소득이 높아야 하고(후농, 厚農), 농민의 지위가 향상되어야 한다(상농,上農)"는 다산의 **'삼농(三農)정책'**을 언급하며 "이러한 다산의 생각은 22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농업과 농업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강조

○ 이어 "가구당 1,100만 원에 불과한 **농업소득 높이기**, AI와 드론 등 **신기술 활용**하기,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신규 유입감소 대책**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곡물자급률 향상**, **환경친화농업**, **농업**의 **첨단산업화 방안**도 **논의**해보겠다"면서 "쌀 풍년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정의당〉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농업인의 날인 **2021년 11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지역·식량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농산어촌 녹색대전환'을 시작하겠다"며 대선 후보 중 처음으로 **농정개혁 공약**을 **발표**

아젠다 발굴

- 첫째, "**국가식량주권위원회**를 **설치**해 21%인 **곡물자급률**을 **30%**로 끌어올리겠다" 면서 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90%까지 확대**, △**농지총량제 실시**, △**토종종자 보호육성** 등을 공약

- 둘째, **전국민 먹거리기본법**을 **제정**, △**먹거리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하며, △**유전자변형농식품**의 **완전표시제**를 **추진**

- 셋째, **생태농어업 대전환**을 위해 △**친환경농어업예산**을 **확대**하고, △**농약·화학비료**는 **절반**으로 **감축**하며, △**농산어촌 에너지자립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도 제시

- 마지막으로 "**모든 농업인**에게 **월 30만 원**의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 소득불평등을 해소해나가고 농산어촌을 선진국답게 혁신하겠다"는 뜻을 밝혀

자료: "각 당 대선 후보 '농업인의 날' 메시지는"(한국농어민신문, 2021.11.12.), "이재명 후보, "식량안보산업 농업 매우 중요"" / "심상정 후보, "모든 농어민에 월 30만원 기본소득"" (농민신문, 2021.11.15.)

통계·조사 2021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2021.11.15.)

❑ 개요

○ [통계청, 2021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 발표, 2021.11.15.] 식량생산 계획, 농산물 가격안정, 농업소득 추계 등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

※ (조사대상 표본 수) 전체 약 6,300개 표본구역

❑ 조사 결과

○ [2021년 쌀 생산량] 388만 2천 톤※, 전년(350만 7천 톤) 대비 10.7%(37만 5천 톤↑) 증가

※ 조정 현백률 90.4% 적용 시: (2020) 3,412천 톤 → (2021) 3,777천 톤

- (증가 원인) 재배면적 증가(0.8%)와 10a당 생산량 증가(9.8%)

▌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 대비(%)
재배면적(천ha)	799	779	755	738	730	726	732	0.8
10a당 생산량(kg)	542	539	527	524	513	483	530	9.8
총 생산량(천 톤)	4,327	4,197	3,972	3,868	3,744	3,507	3,882	10.7

※ 현백률 92.9% 기준이며, 10a당 생산량은 논벼 기준

- (시도별) 전남(79만 톤) > 충남(77만 3천 톤) > 전북(59만 4천 톤) 순

○ [재배면적] 73만 2,477ha, 전년(72만 6,432ha) 대비 0.8% 증가

- (증가 원인) 쌀 가격 상승세※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2021년도 벼 재배면적 증가

※ 쌀 가격(농산물 유통정보, 쌀, 상품, 20kg, 도매, 연평균): (2018) 45,412원 → (2019) 48,630원 → (2020) 49,872원 → (2021) 58,287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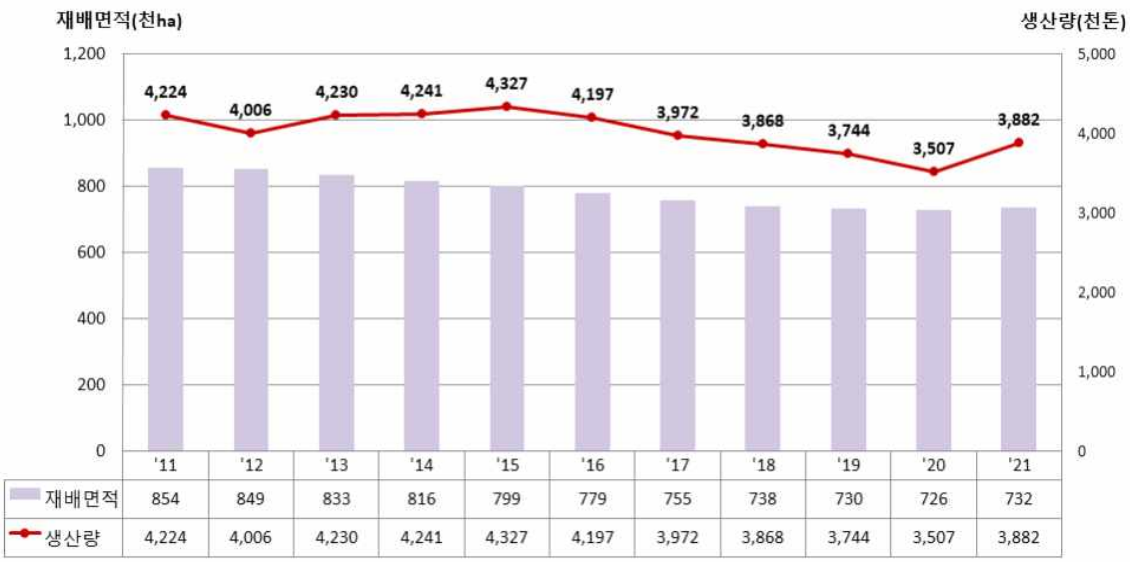
○ [10a당 생산량] 530kg※, 전년(483kg) 대비 9.8% 증가

※ 조정 현백률 90.4% 적용 시: (2020) 470kg → (2021) 516kg

- (증가 원인) 낟알이 형성되는 시기(유수형성 및 수잉기): 평균기온 상승, 강수량 감소, 일조시간 증가 등 적절한 기상으로 완전낟알수 증가 / 벼 낟알이 익는 시기(등숙기): 평균기온 상승 및 강수량 감소 등으로 10a당 생산량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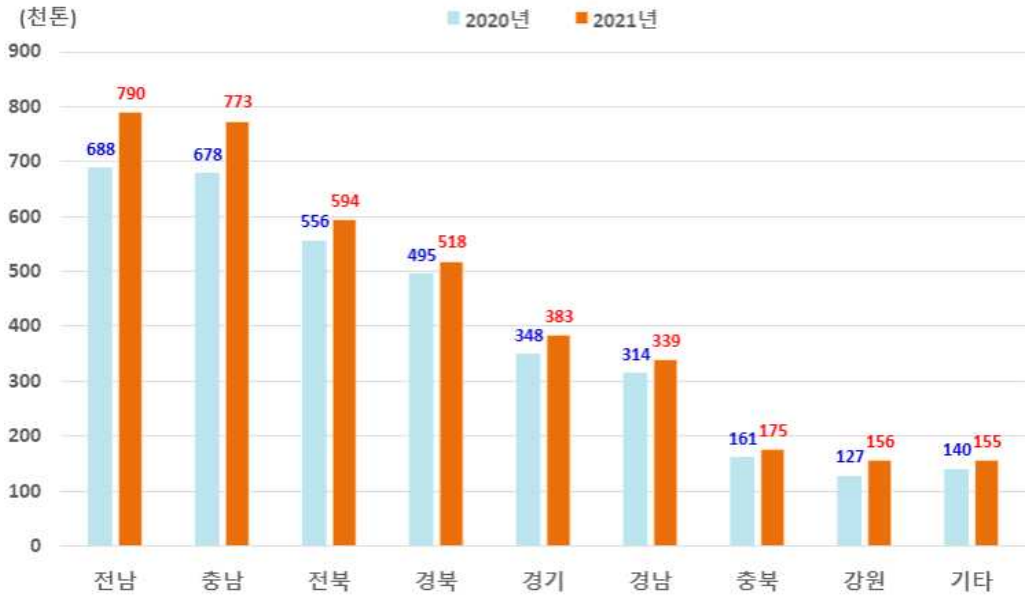
통계·조사

▌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추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재배면적	854	849	833	816	799	779	755	738	730	726	732
생산량	4,224	4,006	4,230	4,241	4,327	4,197	3,972	3,868	3,744	3,507	3,882

▌시도별 쌀 생산량▐



※ 기타: 특·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